



주간통일정세 2012-11(2012.03.05~03.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금속공업상에 전승훈 전 부총리(3/6, 연합뉴스)**
 - 북한에서 '주체철'을 비롯한 금속공업을 담당하는 내각 금속공업상에 전승훈 전 내각 부총리가 임명된 것으로 6일 확인됨.
- **北 김정은 선거승리 러시아 푸틴에 축전(3/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는데 김 부위원장은 축전에서 푸틴 총리의 당선을 축하하고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 **北노동신문 1면 고정구호에 '김정일' 추가(3/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실는 구호를 지난달 26일부터 1면 상단 중앙에 있는 제호 왼쪽의 구호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노동신문의 고정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였으며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추가된 것임.
- **北 '부녀절' 맞아 체제 띄우기 주력(3/8,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북한이 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최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내세우며 체제선전에 주력했는데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불평등과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이 돼 신음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여성들의 낙원으로 동경과 찬탄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부녀절 관련사설을 1면에 실었으며, 또 국립교향악단 여성지휘자 허문영, 인민배우 조청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성희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함.
- **김정은 '여성의 날' 기념음악회 관람(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국제부녀절 기념



하수음악회 '여성은 꽃이라네'를 관람했다고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음악회에서는 리룡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부부가 '어머니 생각'을, 해산을 앞둔 전 보천보전자악단 성악가수 현송월이 '준마처녀'를, 김원홍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부부가 '매혹과 흡모',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족이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무대에 나와 불렀음.

● **北김정은, 서해 초도방어대·해군부대 시찰(3/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9일 서해 초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 행정구역상 황해남도 과일군 소속이었다가 1996년 남포시에 편입된 초도에는 우리의 해병대격인 북한군 해상육전대 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통신은 "이곳 방어대는 1996년 11월23일 섬에서 병사들이 기다린 다며 쏟아붓는 비와 사나운 풍랑 길을 헤치신 장군님(김정일)의 혁명전설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부대"라고 소개
- 김 부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윤동현 인민군 상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리재일 당 제1부부장,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음.

● **北중통 대표단, AP와 공동사진전 위해 방미(3/10, 조선중앙통신)**

- 김창광 1부사장이 이끄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0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이번 사진전시회는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지난해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 사이에 조인된 양해문(MOU)에 따라 열리게 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는 두 통신사가 각각 준비한 조선에 관한 사진들이 전시된다"며 "전시회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영상 사진들을 모시게 된다"고 밝혔음.

● **〈北 "애도기간 100일"...3월말 분위기 전환?〉(3/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한 정부에 연일 거친 비난을 이어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 매체는 지난 2일 인천 한 군부대의 김정일·정은 부자의 사진을 이용한 전투구호에 반발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낸 뒤 다음날부터 김 위원장의 애도기간을 100일로 정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고 있음.
- 리충성 중앙체육학원 청년동맹비서는 지난 9일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



양방송에 출연해 "아직도 100일 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은 동족을 향해서 총부리를 돌려대고..."라며 남측을 비난한 뒤 중앙체육학원 전체 학생들이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김씨 일가의 대 이은 '음악단' 사랑**>(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은하수음악회 '여성은 꽃이라네'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 '은하수음악회'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를 줄인 말로, 최근 북한에서 주목받는 은하수관현악단은 김 부위원장의 전용 음악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만들어진 이 악단은 2009년 9월8일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공연관람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김 부위원장도 참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김정은 동향

- 3/6, 김정은 부위원장, 3.6 러시아 대선 승리 푸틴총리에게 축전(3.6, 중통)
- 3/7, 김정은 부위원장·김영남 상임위원장, 3.7 시리아 3·8혁명 49돌 즈음 시리아 대통령에게 축전(3.7, 중통)
- 3/8, 김정은 부위원장, 3.8 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 기념 은하수음악회 '녀성은 꽃이라네' 관람(3.9, 중통·중·평방)
 - 최영림·리영호·김경희·김영춘·김국태·김기남·장성택·김정각 등 관람
- 3/10, 김정은 부위원장,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해군 제123군부대 시찰(3.10, 중통·중·평방)
 - 이영호(軍 총참모장/차수), 김영춘(인민무력부장/차수), 김원홍·박재경·김영철(대장들), 조경철·윤동형(軍 상장들), 장성택, 박도춘, 이재일, 황병서 동행
 - 남포인근 서해안 전방초소인 초도방어대도 동시 시찰(3.10, 중통·중·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3.8국제부녀절] 102돌 기념 중앙보고회, 3.8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최룡해(黨 비서)·김락희(내각 부총리)·로성실(「여맹」위원장/기념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3.8, 중방·중통)
- '산림 및 경관회복에 관한 국제토론회', 3.7~9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3.9, 중통)



나. 경제

- **中연변자치주, 작년 대북교역 中전체 40% 차지(3/7,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이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
 - 신문은 지난해 연변과 북한의 교역액이 5억9천300만 달러(6천667억 원) 규모로, 중국 전체 대북 교역액 15억 달러(1조6천800억 원)의 39.5%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지린성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 7억1천800만 달러(8천억 원)의 82.6%에 달함.

- **中 "훈춘에 북중러 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3/7, 교도통신)**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최고위 관계자가 훈춘(琿春)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협력모델 지구를 설치해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
 - 장안순(張安順 46)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 **北 1월 중국쌀 수입 급감...옥수수 급증(3/8,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넘게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1월 농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월에 중국에서 614t(23만6천 달러)의 쌀을 수입해 작년 동월의 1만814t(630만 달러)보다 94% 이상 급감했는데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로 1천809t(59만6천 달러)을 수입해 전년도의 600t(17만4천 달러)보다 수량은 배, 금액은 3배 넘게 늘었음.

- **FAO, 北 '식량부족국' 재분류(3/9,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넣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지만 지난가을의 알곡 수확량 증가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북한의 알곡 생산량을 1년 전보다 8.5% 늘어난 466만t(도정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FAO는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식량 수요를 약 540만t(도정후 기준)으로 추산했음.

- **中, 北라선-금강산 유람선관광 4월 정식개통(3/10,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인들을 상대로 북한 라선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다녀오는 관광이 다음 달 정식 개통한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0일 보도



-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시범 운영한 무비자 금강산 유람선관광이 다음 달 14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북한으로부터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여행사들이 이미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내 관광업체는 지린(吉林)성 강휘여행사와 연변(延邊) 천우국제무역유한회사 등 모두 4곳이며, 이 금강산 관광은 연변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선시 고성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도착, 하루를 묵으며 비로봉과 만물상, 해금강, 구룡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로 이뤄짐.
- 금강산 관광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관광비는 1인당 2천980 위안(52만8천 원)임.

●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3/11, 연합뉴스)

-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남북경협보험과 비슷한 투자손실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4년 도입된 남북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뒤 여러 외부요인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손실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
- 북한경제 소식에 밝은 한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조선국제보험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보험사가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 군사

● 연평도 포격도발 주도 北김격식 교체 확인(3/6, 조선중앙방송)

- 4군단은 황해도와 북방한계선(NLL) 등 북한 서해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 6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변인선 4군단 사령관, 양영철 사단장, 김정수 연대장, 윤영식 여단장이 전날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남한의 한 군 부대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을 강하게 비난
- 방송은 4군단 사령관으로 김격식이 아닌 변인선을 소개함으로써 김격식이 교체됐음을 사실상 확인함.

● 北, 10여년간 지대공미사일 수량 20배 늘려(3/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000년부터 최근 10여 년간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기종에 따라 최대 20여배까지 늘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지대공미사일을 옛 소련에서 도입해 최근 자체 개량 기술까지 개발한 북한은 유사시 한미 공군 전투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배치해놓고 있으며 최대사거리 260~300km에 이르는 SA-5(Gammon) 지대공미사일의 수량을 2000년 2기에서 20여배가 증가한 40여기로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7일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사회주의 선경 만들자"...산림녹화에 총력(3/5, 노동신문)

-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중 하나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식수절인 2일 장문의 사설을 포함해 7건의 글을 쏟아내며 나무심기를 독려했다고 전함.
- 신문은 김정은 체제에서 처음 맞은 식수절 기념사설에서 김 주석 100회 생일과 김 위원장의 유훈인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며 '온 나라의 수립화·원림화를 역설했으며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식수절(植樹節)인 2일 미사일지도국을 방문해 기념 식수를 하며 "식수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함.

● 北 남포항 결빙 두달만에 풀려 정상화(3/5, 연합뉴스)

- 북한 제1의 항구이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의 결빙이 두 달 만에 풀렸는데 고려대기환경연구소(소장 정용승)는 5일 최근 열흘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항 앞바다에 있는 얼음이 거의 녹으면서 이달 2일부터 수산업과 화물운송을 위한 정상적인 입출항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탈북 '고난의행군' 때와 닮은 패턴(3/7, 좋은벗들)

- 북한과 중국이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했지만 북한주민이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7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5호)에서 지난달 17일 함경북도 무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라져 인근 국경지역이 전면통제됐다고 주장함.

● 北 안전한 식수 확보 퇴보<유엔보고서>(3/7, 연합뉴스)

-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7일 공동발표한 '식수와 위생 분야의 진전 201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수 분야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국가'로, 위생시설 분야에서는 '궤도에 오른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식수의 경우 상수도, 공공 배수탑, 위생적 우물 등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한 주민의 비율이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100%에서 2010년에는 98%로 줄었으며 도시에서는 주민 99%가 안전한 식수를 확보했지만 농촌에서는 그 비율이 97%에 그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中 단속강화에 탈북자 입국 크게 줄어(종합)(3/8, 연합뉴스)

-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입국 탈북자는 160명(여성 99명·남



성 61명)으로 지난해 1월의 179명의 89%에 그쳤고 최근 5년간 1월 평균인 210명의 76%에 불과한데 지난해 월평균 입국자 228명의 70%, 최근 5년간 월평균 입국자 223명에 비해서도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특별보고관 "北 권력승계로 변화 기회"(3/11, 연합뉴스)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악화하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권력 승계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리더십 교체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절차를 채택하고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 창(窓)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르스만 보고관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담고 있는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기간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평가하고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北은하수관현악단 파리 도착(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권혁봉 조선민족음악연구학회 고문이 이끄는 은하수관현악단이 11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은하수관현악단은 오는 14일 파리에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에 맞춰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을 한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조선중앙통신사와 美 AP통신사 공동개최 사진전시회, 美 뉴욕에서 개최 예정 보도(3.6,중통)
- '北 학생들 영어실력 뛰어나며, 교원들 영어수준도 높다'고 '스튜어트 로운'(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 역사학 교수) 평가(2010~ 평양 금성학원 등 영어 교사), 美 V-A방송인용 자랑(3.8,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전직 국가수반 모임, 'UEP중단-영양지원'협의 환영(3/5, 연합뉴스)

-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는 5일(현지시간) 우



라늄농축프로그램(UEP) 잠정 중단과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24만톤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하는 최근 발표된 북미간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엘더스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UEP,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은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환영할만한 첫 조치"라고 말했으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국제사회와 다시 접촉을 하려는 의지에 고무받았다"면서 "엘더스는 이번 합의가 모든 관련국이 이미 한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 **제네바 인권회의도 탈북자 강제복송 논의(3/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오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복송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日단체, 주일 中대사관서 탈북자 복송 항의(종합)(3/8, 연합뉴스)**
 -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대표 미우라 고타로)과 간토(關東)지방 탈북자협력회 등 일본 내 북한 관련 단체는 8일 낮 12시부터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사카 조선학교 "초상화 제거했다" 보조금 신청(3/10, 아사히신문)**
 -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교무실에 걸려 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의 초상화를 제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
 - 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 9개교가 오사카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받아들여 초상화를 제거했다고 전함.
 - 이 지역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오사카부에 알린 뒤 학생 수가 적은 1개교를 제외하고 8개교분의 2011년도 보조금 약 8천100만 엔(11억 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음.
- **존 케리 "北, 북미 합의 준수 다짐"(3/10,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타결된 북미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음.
 - 케리 위원장은 뉴욕 시라큐스 대에서 사흘째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리 부상을 만났음.
 - 케리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리 부상이 또 미국과 싸우지 않고 다른 관계를 맺길 바라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난(profound)" 의사 표명을 했다고 전했으며, 케리 위원장은 "그들은 지난주 타결된 합의 사항을 지킬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음.



- **北 "美, 식량지원 즉시 시작할 것"(3/10, 연합뉴스)**
 -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0일 북측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식량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 중국 베이징에서 7~8일 열린 북·미 식량지원 회담의 북한 측 대표인 안 부국장은 이날 귀국에 앞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안 부국장은 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北 2.29 합의 이행할 것"〈NCAFP 간담회〉(3/11, 연합뉴스)**
 - 6자회담 북한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간담회를 한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 참석자들은 북한이 최근 북미간의 2.29 베이징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도널드 자고리아 NCAFP 수석부회장과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릿지그룹 선임국장, 마크 민턴 전 주한미국 부대사 등 NCAFP 관계자들은 10일(현지시간) 맨해튼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에서 리용호 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 미국측 관계자들은 6시간에 걸친 이 간담회에서 북한 측에 북미간 합의 이행이나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6자회담(북핵)

- **北 영변 경수로 건설 진전〈ISIS〉(3/6,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핵 관련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달 3일 촬영된 위성 영상을 근거로 들며 "원자로의 터빈 건물은 외형적으로는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中, 6자회담 재개 '군불 지피기' 나서(3/7, 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달 하순 베이징(北京)에서의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분위기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국의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행사 일환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같은 날 청징예(成競業)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가 이를 다시 강조했다며 청 대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데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을 이룬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美, 식량지원 협의…회담 연장(종합3보)(3/7,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 지원 회담을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했는데 이날 회담은 관례에 따라 오전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번갈아 열렸는데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측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지원 물품의 전달 방법과 시기, 관리 주체, 분배 모니터링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했으며 킹 특사는 이날 밤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많은 이슈를 논의했고 진전을 이뤄냈다"며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여전히 있어 내일 만난다"고 밝혔다.

- **임성남 뉴욕 도착..리용호 회동 가능성 시사(3/7, 연합뉴스)**
 -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부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는데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세미나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미 기간에 리용호 부상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는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남북 간에도 최근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 이 부상과의 뉴욕 회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침.

- **美 킹 특사 "매우 생산·긍정적 대화였다"(종합)(3/8,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북한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며, 그는 북한과 식량 지원 방식에 최종적인 합의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워싱턴에 돌아가 내일 토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美 양국의 '제3차 고위급회담' 결과 발표를 비교해보면 "인식과 입장에서 차이점이 선명하게 안겨온다"고 주장(3.5, 조선신보/메아리, 조미고위급회담)
- 미국이 언급을 피한 것들 속에서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 된다는 것과 정전협정의 위치규정도 어디까지나 평화협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임.
- 핵시험,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우라늄농축활동의 임시중지, IAEA 감시허용도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조건부라는 것도 놓칠 수 없음.
- 美 제7함대 기함 '블루릿지호'의 강원도 동해항 입항은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고의적인 긴장조성 행위'라며 '북침공격전술을 현장에서 연마하기 위해 기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韓美당국'이라고 비난(3.6, 중통·평방/블루릿지호는 왜 기어 들었는가)

3. 대남정세

● 北, 이대통령 비난에 욕설·폭언 총동원(3/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정의의 보복성전' '두발가진 미친개'라는 제목의 정론과 글을 통해 "한줌의 인간오물에 의해 민족의 정의, 인류의 정의가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교활한 늑다리개' '특등미친개'라고 지칭했는데 정론에는 "이명박의 00을 꼭 깨여봐서라도 알고 싶을 것이다" "이명박, 네놈은 그렇게 안된다" 등의 폭언과 욕설이 등장했는데 전길수 철도상은 이 신문에 게재한 '군수열차를 몰고 서울, 부산으로'라는 글에서 "명박이를 갈기갈기 00000"고 폭언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투구호 사건과 관련해 '결코 위협사격이 아니다'는 글을 통해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역대 남조선 괴뢰들도 무색케 할 악행 중의 최대 악행"이라며 "결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으며 "온 나라가 무자비한 보복의 격동태세에 들어갔다.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전함.

● 개성공단 의료시설 운영주체에 '일산 백병원'(3/6, 연합뉴스)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6일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운영주체로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관리위는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자 모집에 총 4개 기관이 응모해 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함.
- 관리위는 "출입이 제한된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응급환자 발



생 시 대처능력과 병원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으며 관리위는 일산 백병원 측과 앞으로 위·수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임.

- **통일부 "개성공단 설비반출 이번 주부터 허용"(3/6, 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 설비반출과 창고 개축 등 이른바 '대체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입주기업 123개사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주부터 대체건축이 허용된다"고 말함.
- **통일부, 北접촉 6·15남측위에 과태료 부과(3/6, 연합뉴스)**
 - 통일부는 6일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함.
-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 통일 준비한다(3/6, 연합뉴스)**
 - 경기도북부청은 5월부터 통일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북부청은 5월19일~6월22일 '독일과 함께하는 2012 공감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도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무원, 공공·산하기관 직원 등이 2차로 나눠 참여하며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를 현지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최고존엄 모독' 대남규탄대회 北전역 확산(3/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한 군부대의 전투구호를 빌미로 대남규탄을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한 이후 각계각층의 궤기모임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농업근로자동맹원 및 농업근로자 결의대회가, 개성시 평화리에서 '조선여성들의 규탄대회가 열렸다고 전함.
- **北군인 '李 대통령 이름 표적지' 사격연습(3/7, 조선중앙TV)**
 - 북한 군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와 표적판을 만들어 사격연습을 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가 6일 방영
 - 이날 오후 남한의 한 군부대가 최근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군인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하면서 이 장면을 내보냄.
- **'막강 화력'..포천서 대규모 空·地 합동훈련(3/8, 연합뉴스)**
 -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인 8일 오후 육·공군 합동 화력전투훈련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승진훈련장에서 열렸는데 육군 6군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 K-1A1 전차, AH-1S 코브라 공격헬기, 전



투기 KF-16 등 육군과 공군 병력 900여명이 참가했음.

● **北군인, 이번엔 '李대통령 얼굴그림'에 사격(3/8, 조선중앙 TV)**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평양시 조선민주여성동맹원과 4·25국방체육단 선수들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한 군부대가 최근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데 대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내보냈음.

● **北이탈주민이 가꾸는 통일동산, 인천에 조성(3/9, 연합뉴스)**

- 인천시 남동구는 논현동 주공14단지 등대마을 앞 완충녹지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통일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으며 남동구는 이를 위해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등 300그루를 마련하고 내달 7일 나무 심기 행사를 열 계획임.

● **'키리졸브' 연합훈련 오늘 종료(3/9,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9일 오후 종료되는데 군은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전방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 대기시켰음.

● **탈북자 새국면..대중국 확전·절충모색 갈림길(3/11, 연합뉴스)**

- 지난달 13일 중국에서 탈북자 24명이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작된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외교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 내에선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과 이미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으니 중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자는 온건론이 공존하는 상황임.
-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심 중이며,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탈북자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참가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음.

● **北노동신문 '이명박 사망 소문' 황당 보도(3/11, 노동신문)**

-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연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까지 전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소문 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리명박놈이 뉘엿대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 어느덧 사실처럼 됐다"고 보도



- 신문은 "소문이 얼마나 통쾌하고도 가슴후련했으면 삼시에 평양은 물론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등 전국 각지로 찌하게 퍼져 갔겠는가"라고 전해 이 소문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음.

■ 기타 (대남)

- 南 국방부 장관의 '방위태세 현장점검' 및 발언(2.27, 北 도발가능성 등) 등 관련 "정치군사적 도발의 극치"라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비난 위협(3.5, 중통·노동신문·평방/특등 호전광의 분별없는 광기)
- "조선반도에서 지금껏 전쟁이 터지지 않은 것은 핵무기보다 위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 국방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 선군정치' 선전(3.5, 중통·노동신문/일심단결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은 불패이다)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접한 각계의 對南 위협 반향
 - 금속공업상 전승훈-前 내각부총리(3.6, 우리민족끼리/우리는 결전의 시각을 기다린다)
 - 제2군단 사령관 김형룡, 부사령관 이금철, 사단장 오광수와 제4군단 사령관 변인선, 사단장 양영철, 연대장 김경수, 여단장 윤영식 등 징벌의지 표명(3.6, 중통)
 - 軍장령 주도현(3.6, 중통/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여춘석·주성치(3.6, 중방/이○○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야 말 것이다)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3.3 北 최고존엄 모독 역적패당 규탄 성명 발표(3.7, 중통)
- 「조평통」 대변인 성명, 통일부와 국방부 등 대변인의 대남비방 중단 등의 발언에 대해 '역적패당이 노골적으로 도발을 걸어온 이상 끊어 번지는 보복의 용암을 활화산으로 총폭발시켜 조국통일로 결속할 것'이라고 再次 위협(3.9, 중통·중방)
- '李대통령 사망설이 평양 등 북한 전역에 급속 확산되고 있다'며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소문"이라고 증상 보도(3.11, 노동신문/소문그대로 죽어 마땅한 역적)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영변 경수로 건설 진전" <ISIS>(3/6)

-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핵 관련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달 3일 촬영된 위성 영상을 근거로 들며 "원자로의 터빈 건물은 외형적으로는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연구소는 작년 9월20일자 위성 영상에서는 터빈 건물의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연구소는 그러나 "경수로 건물의 돔(반구형 지붕)은 아직 건물 옆의 지상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 中외교부장 "6자회담 관련국 대화 최근 성과있다"(3/6)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6일 "관련국들이 지혜를 발휘해 공동으로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동북아 장기 평화 구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행사 일환으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시스템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틀"라며 이같이 말했다.
- 양 부장은 북한과 미국이 최근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영양 지원 등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최근 북미 대화가 진행돼 적극적인 진전을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관련국들이 서로 적극적인 태도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부장은 "한반도 안정,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는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구성하는 요소"라며 "이는 관련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관련국들과 밀접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화해를 권하는 노력을 해 왔고 최근 일련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다.
- 아울러 양 부장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정상회의 기간 각국은 핵 원료와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핵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한 토론을 할 것"이라며 "각국이 노력해 새롭고 구체적인 안보 조치를 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편 양 부장은 중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사이에 일부 의견 차이와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은 티베트와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음.

● <中, 6자회담 재개 '군불 지피기' 나서>(3/7)

- 중국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군불 지피기에 나선 모습임. 이곳저곳에서 "이제는 때가 됐다"는 메시지를 날리며 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모양새임. 중국은 지난달 하순 베이징(北京)에서의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분위기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행사 일환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조기 재개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같은 날 청징예(成競業)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가 이를 다시 강조했다. 청 대표는 한반도 핵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데 초점을 맞춘 6자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음. 이어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와 타협, 평화적 수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언급했음. 아울러 최근 북미 회담에서의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한다고도 했음.
- 청 대표의 이런 언급은 양제츠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임. 양 부장은 제3차 북미회담에서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 잠정 중단과 식량(영양) 지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근 관련국들이 서로 적극적인 태도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중국은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중요한 틀이라고 방점을 찍고 있음. 의견차이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일단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라는 주문임.
- 중국이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시기에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보낸 점도 눈여겨볼 만함. 푸잉 부부장은 김정은 지도체제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 고위외교관이었으며 아시아 담당 부부장이라는 점이 눈에 띈. 적어도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북중 '현안'이 두루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임. 나아가 중국이 북한에 6자회담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임.
-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옴. 미국 시라큐스대학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7~9일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공항에서 6자회담 전망을 묻자 "잘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관심을 샀음.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 부상이 방미 기간에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와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시라큐스대학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매개로 한 남북한 간접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7일 베이징에서 대북 식량(영양)지원에 관한



회담을 열고 세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임.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영양지원, 탈북자 문제와 연계해야"(3/6)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탈북자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조건이나 연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유엔(UN)과 오바마 행정부, 미 의회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강제송환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인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조약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처형이나 죽음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정책을 즉각 끝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중국은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고문, 투옥, 처형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에게 말그대로 죽음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소개하면서 "전세계의 의회와 정부가 이 용감한 여성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청문회에는 과거 중국에서 체포돼 여러차례 송환된 적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씨와 딸 조진혜씨가 출석해 직접 겪은 고초를 생생하게 증언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마이클 호로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 北美 식량지원 회담 대표, 베이징 도착(3/6)

- 대북 영양(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대표단이 속속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대표단을 이끌고 6일 오후 4시께 유나이티드에어라인(UA)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킹 특사는 출국장을 나서면서 "내일 북한과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베이징에 찾아왔다"고 짧게 말했다.
- 이날 오전에는 북한 측 회담 대표인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북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대표단은 7일 영양 지원 시기와 방식, 모니터링 방안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임.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이번 회담에서는 (지원 물품이) 어떤 항구를 통해, 언제 전달할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예전 식량 지원 회담 및 3차 고위급 회담 때처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北·美, 식량지원 협의...회담 연장(종합3보)(3/7)

- 북한과 미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 지원 회담을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했음. 이날 회담은 관례에 따라 오전에는 북한 대사관에서, 오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번갈아 열렸음.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측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지원 물품의 전달 방법과 시기, 관리 주체, 분배 모니터링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했음. 미국 대표단에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회담에서 미국 측은 지원 물품이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 전달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모니터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음. 이에 대해 북한은 기존의 대북 지원 모니터링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킹 특사는 이날 오전 숙소인 웨스틴호텔을 나서면서 "우리가 논의하려는 식량 영양 지원(food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세부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모니터링 등 최종 세부 절차 논의에 의견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음. 미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위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을 약속했음.
- 아울러 지난 북미 회담에서 식량 5만t 추가 지원 여부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그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함. 그러나 북한 측 대표가 '협상 실세'가 아닌 부국장급이라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 양측은 첫날 만남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회담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했음. 킹 특사는 이날 밤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 많은 이슈를 논의했고 진전을 이뤄냈다"며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여전히 있어 내일 만난다"고 밝혔다.

● 北美 베이징 식량지원 협의 마무리(종합)(3/8)

- 북한과 미국이 8일 이틀에 걸친 베이징 식량 지원 회담을 마무리했음.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이끄는 미·북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식량 지원 회담을 했음.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경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음.
- 양측은 24만t 규모의 영양보조 식품 전달 시기와 방법, 분배 모니터링



방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미국은 첫날 회담 때부터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30~50명 선의 대규모 모니터링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전달했지만, 북한은 기존의 대북 지원 모니터링 수준을 제시하면서 양측이 다소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킹 특사는 이와 관련해 7일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논의하려는 식량 영양 지원(food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며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FEP) 중단 등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와 연동해 미국이 1년에 걸쳐 매달 2만t씩 영양보조 식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한 측은 지원 시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음.
-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이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영양보조 식품 24만t 외에 일부 추가 식량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3차 고위급 회담까지도 미국이 제안한 24만t 외에 추가로 옥수수 5만t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 대표가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식량 회담 때와 달리 부국장급 인사로 격이 낮아져 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후속 절차만을 논의하는 실무적 성격에 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임.
-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킹 특사는 8일 밤 비행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 美 킹 특사 "매우 생산·긍정적 대화였다"(종합)(3/8)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북한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의 식량(영양) 지원 회담을 마친 킹 특사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식량 지원 방식에 최종적인 합의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워싱턴에 돌아가 내일 토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음.
- 대신 킹 특사는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토론에 매우 만족했다"고 답해 회담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음. 또한 킹 특사는 모니터링 문제를 뜻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려했던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 북한 측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장받았음을 시사했음. 다만 북한이 언제부터 식량 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킹 특사는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北중통 대표단, AP와 공동사진전 위해 방미(3/10)

- 김창광 1부사장이 이끄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0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김일성 주석의 100주년 생일을 맞아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임.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지난해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 사이에 조인된 양해문(MOU)에 따라 열리게 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는 두 통신사가 각각 준비한 조선에 관한 사진들이 전시된다"며 "전시회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영상 사진들을 모시게 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지난해 6월29일(현지시각) 뉴욕에서 AP통신과 평양 종합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MOU를 맺었음.

● 北 "美, 식량지원 즉시 시작할 것"(3/10)

-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0일 북측의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식량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서 7~8일 열린 북·미 식량지원 회담의 북한 측 대표인 안 부국장은 이날 귀국에 앞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안 부국장은 회담에서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이 "진지하고 건설적"이었으며 "만족했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해 킹 특사는 지난 8일 식량 지원 시기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세부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려했던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해 북한 측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장받았음을 시사했음.
- 이달 초 북한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24만 규모의 영양보조 식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연변자치주, 작년 대북교역 中전체 40% 차지(3/7)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이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했음. 신문은 지난해 연변과 북한의 교역액이 5억9천300만 달러(6천667억 원) 규모로, 중국 전체 대북 교역액 15억 달러(1조6천800억 원)의 39.5% 수준이라고 밝혔음. 이는 또 지린성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 7억1천800만 달러(8천억 원)의 82.6%에 달했음.
- 그러나 연변일보가 밝힌 지난해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한국무역협회가 파악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음. 무역협회는 지난 1월 지난해 북·중 교역액이 총 56억2천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신문은 연변의 대북 교역이 200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개했음. 특히 지난해 훈춘(琿春) 등을 통한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북·중의 라선특구 공동개발 추진, 중국 업체들의 본격적인 라진항 사용, 북한 지하자원 수입 확대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음. 연변주는 올해 훈춘과 북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에 나서고 라선특구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대북 교역과 경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
- 양회(兩會)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장안순 연변주 서기는 지난 6일 외신기자들에게 북한, 러시아와 공동으로 훈춘에 물류와 관광산업 중심의 3국 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을 밝히기도 했음.

● 北 1월 중국쌀 수입 급감...옥수수 급증(3/8)

-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넘게 급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1월 농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월에 중국에서 614t(23만6천 달러)의 쌀을 수입해 작년 동월의 1만814t(630만 달러)보다 94% 이상 급감했음.
-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로 1천809t(59만6천 달러)을 수입해 전년도의 600t(17만4천 달러)보다 수량은 배, 금액은 3배 넘게 늘었음. 올해 1월 북중 간 농축수산물 교역액은 작년 1월의 3천537만 달러보다 16% 늘어난 4천100만 달러로 집계됐음.
- 북한의 1월 대중수입 농축수산물은 작년 1월(2천378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3천3백만 달러였고, 대중수출은 작년 1월(1천158만 달러)보다 33% 줄어든 777만 달러였음.

● 中, 北라선-금강산 유람선관광 4월 정식개통(3/10)

- 중국인들을 상대로 북한 라선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다녀오는 관광이 다음 달 정식 개통한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0일 보도했음. 방송은 북한이 지난해 시범 운영한 무비자 금강산 유람선관광이 다음 달 14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북한으로부터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여행사들이 이미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 대행 자격을 얻은 중국 내 관광업체는 지린(吉林)성 강휘여행사와 연변(延邊) 천우국제무역유한회사 등 모두 4곳임. 이 금강산 관광은 연변 훈춘(琿春)에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라선시 고성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도착, 하루를 묵으며 비로봉과 만물상, 해금강, 구룡연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로 이뤄짐. 금강산 관광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관광비는 1인당 2천980 위안(52만8천 원)임.
- 강휘여행사는 올해 4천-5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키로 했음. 이런 계산대로라면 중국 내 4개 대행업체가 올해 모집할 중국인 금강산 관광객 수는 2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북한은 지난해 시범 운영 때 만경봉호를 사용했으나 노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홍콩의 호화유람선을 금강산 관광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여행사 리선복 경리는 "홍콩에서 임대한 이 배는 탑승 정원 600명 규모에 스위트룸과 게임시설, 고급식당, 사우나실, 나이트클럽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호화 유람선"이라며 "라진-금강산 운항 시간도 2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단축된다"고 소개했음. 이 유람선은 연변 조선족이 임대해 운항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첫 운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2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금강산 관광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음.

라. 일·북 관계

● 오사카 조선학교 "초상화 제거했다" 보조금 신청(3/10)

-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교무실에 걸려 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의 초상화를 제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있는 조선학교 9개교가 오사카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받아들여 초상화를 제거했음. 이 지역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오사카부에 알린 뒤 학생 수가 적은 1개교를 제외하고 8개교분의 2011년도 보조금 약 8천100만엔(11억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음. 조선학원의 한 간부는 "초상화는 민족 교육을 지원해준 조국(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나 오해를 일으켜 학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판단을 바꾸자고 학부모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조선학교가 실제로 초상화를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조선학교 보조금을 포함할 방침임. 다만 조선학교측은 '오사카부가 처음에는 교실의 초상화를 제거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교무실의 초상화까지 없애라고 요구했다'는 반감을 갖고 있고, 오사카부의 최대 지역 정당인 오사카우신회 관계자는 '조선학교가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가 끝날 때쯤 보조금을 신청한 의도가 불순하다'며 "추경예산안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 러·북 관계

● 北김정은 선거승리 러시아 푸틴에 축전(3/6)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음. 김 부위원장은 축전에서 푸틴 총리의 당선을 축하하고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혔음. 이어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음.

-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말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조전을 보내온 각 국가 정상들에게 답전을 발송하며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공식등장한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축전, 연하장 등을 보내고 있음.

바. 기 타

● 中 "훈춘에 북중러 협력모델지구 건설" 구상(3/7)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최고위 관계자가 훈춘(琿春)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제협력모델 지구를 설치해 물류와 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음. 장안순(張安順, 46)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이날 베이징 시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음.
- 모델 지구의 넓이는 약 90km²임. 북한의 라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의 항구를 이용해 물류와 러시아의 석탄 같은 자원의 1차 가공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임. 북·중·러 3개국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한족인 장 서기는 조선족자치주의 북한 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노동 협력에 대해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중"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 FAO, 北 '식량부족국' 재분류(3/9)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넣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했다.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지만 지난 가을의 알곡 수확량 증가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알곡 생산량을 1년 전보다 8.5% 늘어난 466만t(도정후 기준)으로 집계했음.
- FAO는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식량 수요를 약 540만t(도정후 기준)으로 추산했음. 이를 기준으로 FAO는 식량 회계연도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에서 약 74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美, 베이징서 대북 인도적 지원 '조율'(3/8)

- 김수권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



사와 대북 식량(영양)지원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김 단장은 같은 날 저녁 킹 특사를 만나 북미 식량지원 세부협약의 첫날 회담 내용을 전달받고 의견을 나눴음. 김 단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한미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방중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북미 식량지원 세부협약이 지원 물품의 전달 방법과 시기, 관리 주체, 분배 모니터링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에 비춰볼 때 김 단장과 킹 특사는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됨. 앞서 북미 양국은 첫날 회담에서 분배 모니터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원 물품이 애초 의도대로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관례대로 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음. 북미 양국은 8일 킹 특사와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식량지원 세부협약의 둘째날 회담을 진행 중임.
- 김 단장은 아울러 방중 기간에 6자회담 실무를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실 관계자와 접촉했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음. 김 단장은 그러나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임.

● 오바마, 한미FTA 이행 포고문 발표(3/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서명한 이 포고문은 한미 FTA와 상충되는 기존 미국 내 규정을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른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 상무부 내에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지정하고,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한미 양국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FTA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임.

● '키리졸브' 연합훈련 오늘 종료(3/9)

-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9일 오후 종료됨. 군은 훈련기간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전방지역의 대포병레이더, RF-4 정찰기, U-2 고공전략정찰기 등 대북 감시자산을 총가동하고, 공군 F-15K 등 초계전력을 비상 대기시켰음.
- 작년에 이어 북한의 '불안정상태'를 가정, 예상되는 대규모 탈북난민 수용 절차와 대량살상무기(WMD) 국외 유출 저지 방안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작년 키리졸브 훈련 때 처음으로 북한 불안정상태를 가정한 토의를 했음.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으며 '불안정사태'로 용어를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절차를 연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벌이는 이번 훈련에는 외국에 주둔하는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100여명과 한국군 20만여명이 참가했으며 예년 수준으로 진행됐음.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전투 훈련에서 K-1 전차가 돌격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북한군은 이 훈련에 대응해 서부지역 4군단 등 최전방부대에 경계근무 강화 태세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연평도와 백령도 전방에 있는 688군부대, 493군부대를 각각 시찰했음. 그는 지난 3일에도 '전략로켓사령부'(미사일 지도국)를 시찰하는 등 한미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보를 보였음.
- 한미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은 내달 30일까지 진행함. 독수리연습에는 미군 1만1천여명(외국주둔 미군 1만500명 포함)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해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함.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은 키리졸브 훈련기간 포사격 훈련과 전투기 비행훈련을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도발이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비자 발급 '더 쉽고 저렴하게'(3/9)

- 미국비자 신청 절차가 종전보다 쉽고 저렴해짐. 주한미국대사관은 9일부터 한 번의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로 미국비자 신청 관련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비스별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비자신청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면 비자 인터뷰 예약에서부터 비자 배송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부터는 신한은행을 통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서비스가 중단된다"면서 "3월8일 이전에 신한은행에 납부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6개월간 유효하며, 비자 인터뷰는 대사관 이메일(Seoulinfo@state.gov)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비자신청 서비스는 대사관의 '글로벌 서포트 전략(GSS)'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사이트 주소는 대사관 홈페이지(seoul.usembassy.gov)에 이날 중 공개될 예정이다.

나. 한·중 관계

● 포스코, 中훈춘 물류단지 5월 착공(3/6)

- 포스코가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 추진 중인 국제물류단지가 오는 5월 착공됨. 6일 포스코 중국 현지법인과 연변 주정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5월 9일 정준양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규형 주중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훈춘에서 물류단지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 착공식에는 중국을 대표해 지린(吉林)성과 연변 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현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포스코 훈춘 물류단지는 2천억 원을 들여 1.5km² 규모로 건설되며 2014년 완공 예정임. 이 물류단지에는 광물 자원과 자동차, 컨테이너를 옮겨실을 야적장과 물류를 보관, 가공, 포장할 수 있는 창고와 배송 시설 등이 들어섬. 훈춘은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의 라진항과 북·중이 공동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6월 착공한 라선특구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국의 관문임. 훈춘-라진항 도로 정비공사가 마무리돼 올해부터 라진항 사용이 본격화되고 라선특구 조성 공사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북·중 경제협력 창구로서 훈춘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하고 있음.
- 포스코는 2010년 지린성 정부와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선도구 개발 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참여와 훈춘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음. 이어 지난해 4월 훈춘시 정부와 물류단지 합작개발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성 예정지 시설물 보상과 철거도 이미 끝냈음. 포스코는 중국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동북진흥책에 따라 '제4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동북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음.
- 2010년 7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동북지역 최초의 포스코 자동차 강판 센터인 '선양 POSCO-CLPC'를 준공, 연간 17만t의 강판을 생산하고 있음.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랴오닝 다롄(大連)에 연간 100만t을 양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공장을 준공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북·중 교역의 70%를 차지, 중국 최대의 대북 물류 거점인 단둥(丹東)에 물류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단둥시 정부와 체결했음.

● 김수권 외교부 평화단장 방중..탈북자 논의(3/7)

- 김수권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과 탈북자 문제를 협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음.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이후 탈북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 정부 관료의 첫 방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김 단장은 중국 외무성의 국장급 한반도 담당자를 만나 탈북자 문제의 해법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 소재 한국총영사관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임.
- 베이징과 선양의 한국 공관에는 국군포로 가족 5명을 포함한 1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 당국의 한국행 거부로 최장 3년 가까이 갇혀 있음. 김 단장은 또한 북측과 영양(식량)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 담당 실무자인 김용길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장은 지난 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태국과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해 탈북자 이동경로를 답사하고 현지 당국과 탈북자 정책을 조율 중임.
- 한편, 한미 외교장관 회담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김 장관은 9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음.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장관급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 中,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범위에 이어도 포함(3/10)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는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해왔음.
- 류츠구이 국장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 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쑹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다표위다오, 중사군도(中沙群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 순항을 통해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및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국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중국 해양국은 작년 12월 13일 3천여톤의 대형 순찰함 '하이젠(海監)50호' 동중국해 순찰에 투입하면서 이 선박이 이어도와 가거초(可居礁) 부근 해역에서도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은 자국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정기순찰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2월4일 중국 해양감시선이 한국의 신안군 '가거초(可居礁)' 인근 해역을 순찰하다 우리 해경에 발각돼 물러나기도 했음.

● 정부, 中에 '이어도 관할권' 보도 확인요구(3/10)

- 외교통상부는 10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류즈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어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km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치는 곳에 있음. 이어도는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km 떨어져 있음. 한중간에는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임.
-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음.

다. 한·일 관계

● <주일대사관, 日대지진 1년 '힘내라 일본' 현수막>(3/8)

- '힘내라 일본! 한국 국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3·11 동일본대지진 1년을 앞둔 이달 5일부터 도쿄 요쓰야(四谷)에 있는 대사관 입구에 이런 내용의 일본어 현수막을 내걸었음. 한국 공관은 지난해 3월 대지진 이후 여러 나라 공관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오사카(大阪)로 옮길 때에도 직원 가족들까지 임지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일본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재해 복구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재해 지역인 도호쿠(東北) 지방의 유일한 외국 공관인 센다이(仙台)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해 3월11일~4월27일 동포를 위한 임시 대피소를 운영했는가 하면 중국, 필리핀 등 제3국 국민의 대피도 도왔음. 이런 공로로 비영리 재단법인 영산재단(이사장 이홍구)이 주는 '2011년 올해의 외교인상'을 받았음.
- 주일 대사관은 이번 현수막으로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표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http://jpn-tokyo.mofat.go.kr>)에 대지진 당시 한국 119구조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도 실었음. 신각수 주일대사는 이달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도쿄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일본 정부의 3·11 1년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임.
- 센다이 총영사관은 현관에 '힘내라 도호쿠! 한국 국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는 일본어 현수막을 내걸었고, 11일 오후 2시부터 미야기·이와테·후쿠시마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영시를 파견함. 한국 대사관과



미나미아자부(南麻布)에 있는 영사부, 센다이 총영사관은 11일 태극기를 약간 내려 걸어 추도의 뜻을 표시할 계획임.

- 도쿄 신주쿠(新宿)에 있는 한국학교는 8일부터 이틀간 학생들이 도호쿠 지방에 전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서예·그림·공작품을 전시하고, 11일 센다이 하치켄(八軒) 중학교에 전달하기로 했음. 한편 동 일본대지진으로 1만9천125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고, 이 중에는 한국과 조선적(朝鮮籍·일본 법률상 무국적), 일본 국적 동포가 20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차관 "日, 위안부문제 조속히 해결해야"(3/9)

-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사사에 켄이치로(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위안부 및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음. 안 차관은 "한일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 나가려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문제"라며 일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재촉했음.
- 이에 대해 사사에 차관은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내보겠다"고 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면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음. 이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임.
- 안 차관과 사사에 차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북미간 2·29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음. 이들은 이 밖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재개문제,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

라. 미·중 관계

● <미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서 '설전'(3/8)

-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설전'을 벌였음. 8일 관영 신화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 평화재단 주최로 7일 열린 화상 콘퍼런스에서 미중 양자관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개진했음.
- 양 부장은 중국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역설했고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공박했음. 양 부장은 우선 미국이 중국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바탕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자고 역설했음. 이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면서 미국 역시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달라고 주문했음. 특히 대만과 티베트 문제라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미국 내에서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



국을 정치 이슈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음.

- 이에 클린턴 장관은 먼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우려를 내놨음. 중국 당국이 올해 국방 예산으로 발표한 금액은 1천억 달러가 넘는다면 이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음. 클린턴 장관은 또 미중 무역 불균형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 그리고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이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음. 세계경제 위기 이슈에서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더 많은 이바지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中 전인대 대표들 "美, 보호무역주의 말라"(3/8)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미국 의회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유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보호무역주의"라며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음. 전인대 대표들은 그 같은 조치가 중국과 미국 관계에 구체적인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음. 이는 미 상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과 베트남 제품에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유지토록 하는 법안을 민주, 공화당 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대한 반응임.
-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산 일부 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수년째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음. 적용 대상은 중국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 제지, 화학제품이고 베트남은 비닐 쇼핑백 등임.
- 전인대 대표인 창더촨은 "중국산에 대한 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서로에게 해가 될뿐더러 국제 무역 관행에도 어긋나고 중국의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그런 조치가 미국의 경제 희생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른 전인대 대표인 황밍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반(反) 덤핑 조치를 우려했음.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유지 조치는 국제적인 규칙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미·일 관계

● 日, 美 해병 이전비 증액 요구 거부(3/8)

-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의 이전 비용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광 이전 비용 가운데 일본의 재정 부담액을 애초 합의했던 28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광으로 이전하는 미 해병대의 규모가 애초 8천명에서 4천700명으로 줄어든 만큼 이전 비용의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미국에 통보했음.

- 미국과 일본은 2006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명의 괌 이전에 합의하면서, 비용 102억7천만 달러 가운데 일본이 재정부담(28억 달러)과 용자 등으로 32억9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음. 미국은 이 가운데 일본에 상환해야 하는 용자액은 줄이는 대신 상환 의무가 없는 재정부담을 12억 달러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음. 미국과 일본은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 등과 관련해 8~9일엔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 협의, 12~13일에는 심의관급 협의를 계속함.

바. 미·러 관계

● 美 "러시아와 기밀 국방정보 공유 협상중"(3/7)

- 미국은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덜기 위해 미국의 일부 기밀 국방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음.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열린 하원 군사소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국방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전임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시작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협정에 따라 공유 가능한 정보의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
- 핵과 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하는 로버츠 차관보는 "적절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기밀 정보의 제한적 공유를 통해 양국이 잘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협상에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 러시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떤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국방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바마, 푸틴위해 G8 회의 장소 바뀐다" <러 언론>(3/1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열리는 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장소를 시카고에서 대통령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로 갑자기 변경한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자를 배려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음.
- ◇ "5월 취임 푸틴에 부담주지 않으려" =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최근 대선에서 승리해 5월 취임하는 푸틴 총리에게 미국과의 불화로 임기를 시작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G8 회의 장소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백악관은 G8 정상회의를 2개월여 남겨둔 지난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8 회원국 정상들을 오는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메릴랜드 주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고 나토 동맹국들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휴타운 시카고에서 맞을 예정"이라며 장소 변경을 발표했다. G8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및 러시아-나토 정상회의를 모두 시카고에서 열려던 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임.



- 이후 백악관의 전격적 회의 장소 변경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제기됐었음. 백악관 소식통은 신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의 장소를 옮긴 가장 큰 이유가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확정된 푸틴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시카고 G8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러시아-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음. 그러나 러시아는 차기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협상이 진척될 때만 러시아-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란 등의 위협을 구실로 유럽에 구축하려는 MD 시스템이 자국의 핵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 시스템이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MD를 둘러싼 양국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음.
- 백악관 소식통은 "5월까지 MD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푸틴이 G8 회의 참석 후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시카고를 떠날 경우 양국 간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막 3기 임기를 시작하는 푸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G8 회의의 장소를 전격적으로 바꿨다는 것임. 그렇다고 MD 문제 해결없이 러시아-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푸틴이 갑자기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 미국이 양보를 했다는 것임.
- ◇ "시카고 시장조차 모른 전격적 결정" =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여당 후보인 푸틴 총리의 대선 당선이 확정된 후 G8 회의의 장소를 캠프 데이비드로 옮기기로 결정했음. 백악관의 결정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심지어 한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시카고 시장 램 이매뉴얼조차도 회의 장소 변경 사실을 공식 발표 몇시간 전에야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임.
- 오바마는 9일 뒤늦게 푸틴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음. 백악관은 그 하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에게 대선 승리 축하 전화를 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리셋(reset·화해) 정책'을 지속할 필요에 공감하고 푸틴 당선자를 캠프 데이비드 G8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오바마의 축하 전화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늦은 것이었음. 이 때문에 오바마와 푸틴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분석들도 제기됐지만 오바마가 푸틴의 입장을 배려해 마지막 순간에 G8 회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게 됐다는 해석임.
- 물론 이 같은 결정은 오바마에게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백악관 소식통의 설명임. 러시아와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오바마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러시아와의 화해정책이 실패했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란 것임.



사. 중·일 관계

● <日, 중국방비 급속 팽창에 충격…중위협론 커져>(3/5)

- 일본이 중국의 급속한 국방예산 팽창에 충격을 받고 있음. 중국이 발표한 국방 예산의 절대액도 크지만 각 부처의 예산에 숨어 있는 국방관련 예산을 모두 합할 경우 실제로는 발표의 2배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5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다니가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발표한 직후 기자단에 "중국의 군사 동향에 예산을 포함한 불투명성이 있다는 것은 국제 사회의 우려 사항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방비가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는 뜻임.
- 아사히신문은 중국의 작년 국방 예산이 발표액의 1.7배에 달한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11.2% 늘어난 1천64억 달러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음. 중국군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전략학회'의 현역 장성(소장)은 지난 2월 베이징을 방문한 외국 국방 당국자들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군사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할 경우 실제 국방예산은 공표액의 1.7배에 달한다"고 증언했음. 일본 도시샤(同志社)대의 아사노 아키라(浅野亮) 교수는 중국의 작년 실제 국방비를 발표의 1.5~2배로 추정했음.
- 복수의 중국군 관계자에 따르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대함 탄도미사일 '동평 21-D' 등의 무기 개발과 제조 비용의 일부는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았음.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2007년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일본의 4.8~6.5배, 2030년에는 9.1~12.1배로 격차가 확대되고, 이 시점에서 미국의 국방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일본의 1.85배로 팽창했지만, 우주개발 비용이나 신형무기 개발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불투명성이 높다"고 비판했음. 이 신문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아시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에 대해 군사력 정비를 서두르는 동시에, 발언력을 강화하는 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중국의 국방비는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국제사회의 중국 위협론을 한층 자극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중국이 경제력을 업고 국방비를 팽창시켜 가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임. 일본의 국방비는 10년 연속 감소하면서 5조 엔을 밑돌고 있음.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 등 주변국과의 공조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은 상황임.



● 中외교부장 "日, 다오위다오 민감성 인식해야"(3/6)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이 6일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尖閣列島>)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일본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음. 양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제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반적인 이해가 걸려 있다"며 그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 그는 일본 측이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봐야 한다며 중일 관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고려해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일 양국이 전략적 신뢰를 높이려면 서로 발전을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보면서 서로 발전의 기회이자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음.
- 그의 이런 언급은 최근 중일 양국 간 다오위다오와 그 주변 섬에 대한 '작명(作名)'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됨.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 70곳에 대해 중국식 이름을 짓고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센카쿠 열도의 4개 섬을 비롯해 부근 무인도 39곳에 일본 이름짓기를 마쳤다고 밝혔음. 중국은 대만 북동쪽에 있는 다오위다오가 명·청 이래로 항해와 풍랑 피난처로 활용돼온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무인도였던 센카쿠 열도를 선점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라고 맞서고 있음. 다오위다오는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 중임.
- 양 부장은 이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중일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상기시키면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3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음.

● 中대사관, 난징학살 망언 日시장 방문요청 거절(3/6)

- 주(駐)일본 중국대사관이 난징(南京)학살 망언의 당사자인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장의 방문 요청을 거절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음.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은 5일 방문을 시도했으며 나고야시와 난징시 간 교류를 복원하자는 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가와무라 시장은 지난달 20일 중국 정부 인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중일 전쟁 와중인 1937년 난징에서 통상적인 전투행위는 있었으나 학살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언해 거센 반발을 불렀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견해를 굽히지 않았음. 중국은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난징시는 가와무라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1978년부터 지속해온 나고야시와의 교류를 중단했음.
- 난징시는 또 이달 9일부터 시작될 '일본문화주간' 행사를 연기했고 앞서 지난 2일 열릴 예정이던 중·일 유도대회도 취소했음. 이와 관련해 일



본 정부는 문제의 발언은 나고야 시장의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음.

● 日단체, 주일 中대사관서 탈북자 복송 항의(종합)(3/8)

-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대표 미우라 고타로)과 간토(關東)지방 탈북자협력회 등 일본 내 북한 관련 단체는 8일 낮 12시부터 도쿄 미나토(港)구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음.
- 이날 시위에는 미우라 회장과 일본에 사는 탈북자 외에도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회장, 마스모토 데루아키(増元照明, 니시오카 회장 오른쪽 검은 색 옷)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학회(가족회) 사무국장 등 7명이 참석했음. 이들은 웹사이트 등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그들의 희망대로 제3국(한국)으로 보내라"는 등의 주장을 내 걸었음. 마스모토 사무국장은 이날 시위 도중 "(탈북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북한)는 지구 위에 필요 없다"며 "일본은 그런 국가와 국교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음.
- 한편 재일동포 조직인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은 이들과는 별도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 중·러 관계

● "러-中, 10년내 최대 무기거래 임박" <러 언론>(3/6)

-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10년 내에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앞두고 있지만 복제품 제작 금지 문제를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신문은 러시아가 자국산 수호이(Su)-35 다목적 전투기 48대를 중국에 공급키로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으며 거래 규모는 40억 달러(약 4조5천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양국이 현재 마지막 관문인 복제품 생산 금지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중국이 Su-35 복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임.
- 이번 거래는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러-중간 군사협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 수출 규모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양국은 2003년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
- 중국은 2008년 중국 현지에서 열렸던 국제 에어쇼에 출품된 Su-35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뒤 러시아측과 구매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35는 첨단 5세대 전투기에 앞선 4++세대 최신 전투기로 넓은 전투 반경을 자랑함. 시속 2천500km의 속도로 3천4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1천600km에 이룸. 30mm 기관포와 로켓포 및 폭탄 등으로 무장이 가능함. 대당 가격은 약 8천500만 달



러임.

-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러시아제 '원조' 전투기와 중국제 '복사판'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함. 중국은 러시아 Su-27 전투기를 본떠 젠(J)-10을, Su-30을 복사해 J-11을 만들었음. 중국제 FC-1 전투기는 러시아제 미그(MiG)-29의 복사판임. 중국은 최근에도 러시아제 Su-30의 개량형인 Su-30MK2를 복사해 J-16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음.
- 중국은 이렇게 자체 생산한 '복사판' 전투기들을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제 '원조' 전투기들보다 3.5배나 싼 가격에 제안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 관계자들은 불평함. 성능을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물론 러시아제를 선호하지만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은 중국제에 관심을 보여 러시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임.

● 후진타오, 푸틴에 전화..."전략적 협력 강화하자"(3/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음. 후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노력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 경지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가 7일 전했다.
- 후 주석은 "중러 쌍방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협력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가동되는 가운데 국제무대 및 지역에서 양호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후 주석은 이어 "중국 정부와 인민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 사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푸틴 총리는 "최근 양국이 각 영역의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있고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이 푸틴의 3선 도전 성공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지만 중국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축전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푸틴 지지 의사를 나타냈음.
- 앞서 후 주석은 5일 푸틴 총리에게 보낸 축전에서 "강하고 번영하는 러시아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더욱 찬란한 업적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를 비롯한 국제 감시단이 러시아 대선에 공정성이 모자랐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음.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대선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많은 국제 감시인들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 러·일 관계

● 日, 푸틴 당선에 반색...영토문제 해결 기대(3/6)

-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승리하자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음. 6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푸틴 총리의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축하전화를 걸어 "일러 관계의 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또 "영토 문제에 대해 푸틴 총리와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협의와 공조를 제안했음.
- 노다 총리는 지난 3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과의 특별 회견 때도 "푸틴 총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양한 논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푸틴 총리의 대선 승리에 반색하는 것은 영토문제에 강경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달리 푸틴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푸틴 총리는 지난 2일 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문제에 "타협점을 찾아 최종적인 결론을 짓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음. 일본 언론은 푸틴 총리의 이 발언이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음. 일본은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서두르고 있음.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5월 19~20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음.
-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여전히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가 커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함. 일본은 쿠릴열도의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푸틴 총리는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취한 뒤 1956년 공동성명에 따라 2개 섬만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임. 일본에서는 소비세 인상 문제로 총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고, 푸틴 총리도 취임하면 내정에 신경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외교 사안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토 문제의 본격 협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日총리 "러, 쿠릴 2개섬 반환만으론 안 돼"(3/8)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빚는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해 2개 섬만을 반환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지난 2일 외신과의 회견에서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 '무승부'론을 들고 나오는데 대해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면적은 전체 쿠릴열도 면적의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섬만 돌려받아서 '무승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는 푸틴 총리가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반환



을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유도에서의 '무승부'를 언급한 데 대한 반론임. 노다 총리는 "쿠릴열도의 나머지 93%까지 돌려받지 않고서는 무승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혀, 4개 섬 모두의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음. 그는 또 "(전체 면적 등을 생각지 않고) 4개 섬 가운데 2개 섬이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승부'는 쌍방이 납득 가능하다는 의미이다"고 밝혔음.

차. 기 타

● 中 후진타오 재임 마지막 전인대 개막(3/5)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1기 5차회의가 5일 정식 개막됐음. 의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각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열흘간 열리는 전인대는 중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논의함.
- 이번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전인대 행사임. 오는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이양될 예정임. 따라서 이번 제11기 5차회의는 지금 중국의 최대 현안인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전인대는 관례대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로 시작함.
- 개막식에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책정했다고 보도했음. 중국 정부의 작년 GDP 성장 목표치는 8.0%였고 실제 성장률은 9.2%였음. 이처럼 중국 정부의 예상 성장률 발표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점으로 미뤄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8.0~8.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원 총리는 아울러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목표치를 4.0%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그러나 작년에도 4.0% 목표치에도 최종 CPI 지수는 5.4%였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전인대에서는 부정부패, 소득 및 지역격차, 티베트·신장위구르 사회불안,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임.
- 리자오싱(李肇星) 전인대 대변인은 개막 하루 전인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천702억 7천400만 위안(약 118조9천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전인대에는 최측근과의 분란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됨. 전인대는 오전 개막식에 이어 오후부터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분야별 토의로 이어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제11기 5차회의는 이틀 앞선 3일 개막됐음. 정협 위원 2천200여 명은 이날 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청취하고 셋째 날 행사를 진행함.

● 〈푸틴 러시아 한반도 문제 목소리 높일 듯〉(3/5)

- 대통령직 3선에 도전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당선을 계기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음. 정부의 한 당국자는 5일 "(푸틴의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독자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기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음. 푸틴 총리가 선거과정에서 야당 후보들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미(反美) 구호를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민주화와 관련된 내부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국제정치적 위상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임.
- 이 당국자는 "러시아는 6자회담에 큰 관심이 있고 과거 6자회담을 할 때 한반도평화분과를 맡은 경험도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푸틴 3기의 한반도 정책방향은 푸틴 1, 2기 및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기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지난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 윤곽을 잡았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방향은 주변 강국들과 동등하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었음.
-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한 팀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이번에 그 팀이 위치를 바꾸는 것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아시아를 더 중시하는 정책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9월 극동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러 함대, 잠수함 초계기 새로 도입(3/6)

- 러시아 북해함대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새로운 대잠초계기를 도입했음. 북해함대 대변인 바딤 세르가 대령은 "현대화한 일류신(IL)-38N 초계기를 북해함대 공군기지에 배치중"이라며 "북극해까지 초계할 수 있고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투능력이 있다"고 밝혔음. IL-38N은 또 노벨라 센서 시스템을 탑재해 200마일 내 목표물을 감지하고 수중과 지면, 공중 목표물의 레이더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초계기를 설계한 일류신 항공 설계국이 러시아의 주요 항공 우주 설계국이라고 밝히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해군함대가 보유한 대다수의 IL-38S 초계기도 새 기준에 맞게 개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신장·티베트 지도부, 극단주의 엄단 강조(3/8)**

- 중국의 화약고인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시짱·西藏) 자치구 지도부가 극단주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음. 신장위구르의 장춘셴(張春賢) 당 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테러행위는 종교문제도 아니고 민족문제도 아닐뿐더러 반(反) 인류적 범죄"라면서 그와 관련해선 "인정(仁政)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中 신장·티베트 지도부, 극단주의 엄단 강조(3/8)**

- 중국의 화약고인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시짱·西藏) 자치구 지도부가 극단주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음. 신장위구르의 장춘셴(張春賢) 당 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테러행위는 종교문제도 아니고 민족문제도 아닐뿐더러 반(反) 인류적 범죄"라면서 그와 관련해선 "인정(仁政)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장 서기는 이어 지난달 28일 신장위구르의 카스(喀什)시 부근 예청(葉城)현에서의 흥기 난동사건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면서 분리주의,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음. 그는 사건 당시 "폭도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상대로도 흥기를 휘둘렀다"며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에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신장위구르의 누얼 바이커리(위구르족) 주석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범죄의 대부분이 '동(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음.
- 예청 사건은 물론 작년 7월 허텐(和田, 호탄)시에서의 파출소 공격사건과 카스(喀什)시에서의 무차별 흥기 난동 사건의 배후에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임. 누얼 주석은 테러분자들이 파키스탄 내 테러조직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인접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공동으로 테러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별적인 테러행위 때문에 우호관계가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위구르인 950만 명 이상이 사는 신장위구르 지역은 1759년 청나라 지배에 들어간 이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벌여오고 있음. 2009년 7월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서 한족과 위구르인의 갈등이 폭력 시위로 번져 197명이 숨지고 1천700여 명이 부상했음. 이 때문에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권 통치는 또 다른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티베트 자치구의 바이마츠린(白瑪赤林) 주석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달라이 라마와 그 추종 세력이 젊은 층을 선동하고 있지만,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티베트인이 중시하는) 사찰과 종교 관습을 존중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역설했음.
- 그러나 티베트 자치구는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주민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넷 사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가 하면 자치구 내 주요 도시에 공안 병력을 추가 투입해 경계경비를 강화하는 등 공안통치의 고삐를 죄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 1년 새 티베트 자치구와 그 주변의 쓰촨(四川)성 등에서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분신 시도가 20차례 이상 잇따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숨졌음. 지난 3일과 4일 간쑤(甘肅)성과 쓰촨성에서 10대 여학생과 30대 여성이 분신한 데 이어 5일에도 쓰촨성 아바(阿<土+霸>)현에서 도르지라는 이름의 18세 소년이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분신, 사망했음.

● 앰네스티 "日, 위안부 생존자에 사과·배상 해야"(3/8)

- 국제앰네스티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생존자들의 정의를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음. 앰네스티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모든 배상 의무가 평화협정과 합의를 통해 끝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음. 이 단체는 "생존자들은 신체·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수치심을 느꼈고 성노예 생활의 결과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피해 여성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많은 이들이 정의 회복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말했음.
- 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와 의회가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명확히 사과하고 법적 배상의 장애물을 없애는 관점에서 국내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설명을 포함하고 생존자 배상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음.

● 中외교부 "북미 접촉 강화 지지"(3/8)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8일 "미국과 북한의 접촉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北京)에서 이틀간 열린 북미 식량(영양)지원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음. 그는 "중국은 북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를 희망하며 공동노력으로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순조롭게 실현돼 6자회담을 재개할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미 양국, 그리고 여타 관련국들과도 밀접한 소통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7~8일 베이징의 북한과 미국 대사관을 오가며 식량지원 세부협의를 했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제네바 인권회의'도 탈북자 강제복송 논의(3/8)

- 오는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복송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다를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한 국가들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워치'를 비롯한 20여 개 민간 인권단체가 개최하는 연례행사임.

- RFA는 이번 회의를 준비하는 '유엔워치'의 애리얼 하디다 특별사업국장을 인용해 이번 회의에 김주일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탈북자 2명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는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복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기 위해 회의 기간에 수십 점의 관련 그림과 사진도 전시할 계획임.
- 한편 지난달 27일 시작된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는 14일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潘총장 "탈북자 문제에 깊은 우려 공유"(3/9)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8일 (현지시간) 최근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상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반 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인근 식당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간에 합의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 반 총장은 무엇보다 탈북자들의 신변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인도적 고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은 관련 당사국들이 요청하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심각한 식량 및 영양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재확인했음.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모든 공여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반 총장은 최근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단계 조치에 합의한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합의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포함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대화가 중요한 만큼 양측의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반 총장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음. 그는 우리 정부가 핵테러 예방과 범세계적인 핵안보 및 핵안전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진전시키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김 장관은 오찬이 끝난 뒤 "인도적인 사항에 우려를 공유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탈북자의 대규모 복송설에 대해 "얘기는 전해 들었지만 중국 정부가 확인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만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임. 우리 정부는 12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고할 때 토론을 통해 중국을 겨냥, 탈북자의 강제북송 금지를 재차 촉구할 방침임.

● <고침> 국제("동해와 일본해 대신 '解決海'로 표기하자")(3/10)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동해나 일본해 대신에 '해결해(解決海)'라는 제3의 명칭으로 표기하자." 폴 우드만 전(前) 영국 지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8회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기발한 제안을 했음.
- 우드만 전 사무총장은 한·일 양국 간에 바다 명칭에 대한 분쟁이 국제사회의 해묵은 현안이 돼 있으나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화해의 해결책(resolution)'으로 이러한 제3의 명칭 사용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 해역을 영어로는 'Sea of Resolution'으로 표기하고 일본은 '解決海(가케이수-카이)'로, 한국은 '해결해(解決海)'라고 표기하자는 것임.
- 그동안 동해 명칭 분쟁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화해'라는 제3의 명칭을 검토해 보자고 말한 바는 있으나 외국의 관련 전문가가 국제회의에서 제3의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노형 동해연구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설명했다. 우드만 전 사무총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과 달라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평가됨.
- 우리는 동해 단독 표기를 원하지만 일본의 '기득권'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음. 또 양측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제3의 안이 정서적으로 수용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지적됨. 그러나 이 제안은 일본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이 국제수로기구(IHO)의 소위 'A426 결의안'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방증하는 국제적인 자료가 또 하나 추가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서대원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은 지적했다.
- '아시아와 유럽의 관점'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세미나에선 지명 분쟁과 관련한 유럽의 다양한 사례와 견해들이 소개됐음. 이졸데 하우스너 오스트리아 학술원 교수는 유럽 대륙 북서쪽의 바다가 오랫동안 '독일해'로 표기되다 '북해'로, 로마 시대에 '우리 바다'로 불렸던 유럽·아프리카·아시아 사이의 바다는 '지중해'로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너 교수는 또 여러 나라를 가로지르는 유럽의 강들의 이름은 대체로 교차 지역 국가들의 명칭이 병기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데이비드 먼로 영국 던디대학교 교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온 북유럽의 동해인 발트해가 유럽연합 통합 과정에서 발트해로



합의가 됐으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통해 해결하는 '합의에 의한 다양성'을 해결책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음.

- 브라힘 아투이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부의장은 "IHO와 UNGEGN은 공유하는 지역의 명칭에 대해 관계국들이 공통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두 명칭을 병기하지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박노형 회장은 공통의 명칭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병기를 한다는 IHO의 'A426 결의안'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이번 세미나에서 확인한 점이 성과 중 하나라고 말했음.
- 박 회장은 내달 열릴 IHO 총회는 정부 간 기구여서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이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음. 그는 그러나 지난 1990년 초반 처음 동해 표기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를 시작할 당시 동해 병기율이 3%였으나 이젠 30% 가까이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와 국제 전문가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日 여론조사 "대지진 후 자위대에 호감" 92%(3/11)

- 일본인 중 상당수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자위대에 호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내각부가 1월5~22일 성인 남녀 1천893명을 상대로 '자위대·방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위대에 호감이 간다"(37.5%)거나 "어느쪽이냐면 호감을 느낀다"(54.2%)고 답변한 이가 91.7%에 이르렀음.
- 일본 정부가 1969년부터 3년에 한 번씩 벌이는 이 조사에서 자위대에 호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9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임. 2009년에는 80.9%였음. 호감의 원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위대가 보여준 복구 활동이었음. 응답자 중 97.7%가 대지진 후 자위대의 활동을 "평가한다"고 대답했음. 미군의 재해지원 활동인 '도모다치(친구) 작전'에 대해서도 79.2%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도움됐다는 답변도 81.2%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음.
- 자위대나 방위 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음.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이 크다"거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9.8%로 치솟았음. 이 또한 이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최고치였음. 자위대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도 2009년보다 10.7% 포인트 늘어난 24.8%에 이르렀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